

The Reunified Korea Economy

月刊

統一經濟

1997. 4 통권 제28호

現代經濟社會研究院

統一經濟 4 1997 제28호

편집자의 글
다가오는 4者회담2

초 점
북한 외교: 현상과 본질 • 남문희4

특 집
4者회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건과 과제 • 허남성10
4者회담 제의 1 년에 대한 평가와 각국의 입장 • 김용호18
4者회담 추진 방향과 정부의 과제 • 김국진27

논 단
김정일 정권의 권력 재편과 안정성 분석 • 정규섭38
북한 무역의 구조적 특징 • 이찬도51
북한의 환경 실태와 장단기 과제 • 박송동64

통일다리
북한의 식량난과 김일성 생일 행사 • 김인구77

북한경제
권역별 투자 환경(Ⅳ)-'압록강권' • 홍순직81

통일연구
구동독 이주민 발생과 구서독 정부의 대처 • 조웅남96

통 권 제28호
등록번호 라-6925
등록일자 1994년 12월 2일
발행일자 1997년 4월 10일
편집 및 발행인 김중웅
편집위원 정순원(위원장)
이무촌 김정관
홍순직 오상교
이병우
편집주간 심재철 이배설
편집교열 장은숙
발행처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78
대표전화 (02)737-4006
F A X (02)730-1771
인쇄 서울컴퓨터인쇄사
대표전화 (02)636-0555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는 무단 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필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다가오는 4者회담

이와 반도에도 봄은 오는가? 최근 4者회담 개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황장엽 前 북한 노동당 비서의 망명 사건 이후 나타나고 있는 북측의 태도 변화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태도 변화는 결국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한 일련의 여건 변화는 남북 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달의 초점은 「시사저널」 국제부 남문희 기자의 “북한 외교: 현상과 본질”로 황장엽 사건 이후 북한의 외교 행태를 북미 관계의 틀 속에서 식량난과 연계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정치 일정과 연관된 북한의 대남 전략을 언급하고 있다.

이번 특집은 “4者회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 하에 먼저 하남성 국방대학원 교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건과 과제”에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은 남북한의 문제이자 국제적 사안으로 우선 4者회담의 틀 속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주장하면서, 그 형식은 남북한이 주체가 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보장자가 되는 2+2 형태가 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러시아와 일본이 가담하는 2+2+2의 형식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민족통일연구원 김용호 연구위원은 “4者회담 제의 1년에 대한 평가와 각국의 입장”에서 4者회담은 북미 관계는 물론, 남북 대화의 진전이라는 부산물을 산출할 수 있는 회담임을 북한측에 주지시키는 것이 4者회담에서 남한이 주도적으로 모색해야 할 대안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교안보연구원의 김국진 교수는 “4者회담 추진 방향과 정부의 과제”에서 정부는 4者회담과 관련하여 미국과의 공조체제 유지는 물론 중국과도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위기 관리의 시각에서나 통일 외교 측면에서 우리의 對미·중 외교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이번 호의 기획 연구는 필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게재하지 못하였으며, 독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란다.

논단은 모두 3 편으로, 먼저 관동대학교 정규섭 교수는 “김정일 정권의 권력 재편과 안정성 분석”에서 김정일유일체제는 김일성유일체제와 마찬가지로, 북한식 사회주의의 견지와 개혁·개방의 필요성이라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안정적인 기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김정일이 유일·폐쇄체제를 고수할 경우 이미 권력의 핵심

을 장악한 군부의 일부 세력이 김정일을 축출하고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중부대학교의 이찬도 교수는 “북한 무역의 구조적 특징”에서 어느 국가이든 수출이 경제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수출 산업이 경제적 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겠지만, 정치·사회·문화 면에서의 후진성에도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북한도 예외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원의 박송동 연구위원은 “북한의 환경 실태와 장단기 과제”라는 제목으로 대북 경제 협력에서 환경 보전형 경제 협력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김인구 기자는 “북한의 식량난과 김일성 생일 행사”에서 식량난으로 인한 주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망한 김일성의 생일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는 북한 정권의 불합리성을 각종 사례를 들어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어 우리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번 호의 권역별 투자 환경 평가는 본 연구원 홍순직 연구위원의 “압록강권”에 대한 내용으로 同지역의 투자 환경에 대한 종합 평가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나진·선봉권이나 평양·남포권, 원산·함흥권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투자 진출 방안으로 단기적인 이익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두보 및 동북아 물류 전진 기지의 확보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원의 조용남 과장은 “구동독 이주민 발생과 구서독 정부의 대처”에서 독일의 선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① 북한 당국과 대화를 하는 목적은 분단에 따른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한 것이라는 복안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 ② 이주민의 규모가 대량화될 경우 이 문제가 체제 통합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체제 통합 방식과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갖는 점, ③ 협상 과정에서 인권 상황 개선과 분단의 고통 해소를 위해 그들에게 경제적인 반대 급부도 제공했지만 법적인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 ④ 정착 지원 담당 기관과 관련 각급 정부는 물론, 민간·사회 단체가 광범하게 참여하여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나누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지금은 북한의 태도 변화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새로운 움직임이 태동하려는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현실적인 대북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을 자각하고 슬기롭게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1997년 4월
편 집 자